



<<핵심체크>> 관료제의 병리 현상

훈련된(전문화된) 무능	관료들이 한 가지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져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현상
할거주의(국지주의)	관료들이 편협한 안목으로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이익에 묶여 전체이익을 망각하는 현상
Peter의 원리	계층제로 인하여 관료들이 무능력의 수준까지 승진하는 현상
권력구조의 이원화	상사의 직위에 의한 권한과 부하의 전문성에 근거한 권한의 충돌하는 현상
인간적 발전의 저해	집권적·권위주의적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비사인적 역할관계로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 충족이 저해되는 현상
목표대치(동조과잉)	관료들이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수단인 법규를 더 중시하는 현상
번문옥례(red tape)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문서처리가 과다발생하는 현상
권위주의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위주의의 행태
무사안일주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쉐신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관료의 행태
관료제국주의	관료들의 권한행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현상
마일(Mile)의 법칙	관료가 자신이 속한 조직, 지위, 신분을 대변하는 현상

3.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정책 -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 ②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 ③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④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답) ① 배분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불특정 다수이므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구분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체크>>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구분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개념	정부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정책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부담자 : 불특정 다수(공공재원)</li> <li>•수혜자 : 불특정 다수</li> <li>•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미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부담자 : 고소득층</li> <li>•수혜자 : 저소득층</li> <li>•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분리</li> </ul>
게임의 상황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	영합게임(Zero-Sum game)
행태	상호불간섭이나 상호수용	이데올로기상의 심각한 갈등
주요행위자	관료 또는 하위정부	대통령(엘리트주의적 시각)
사상	자유주의(1차적 배분)	이전주의, 계급주의(2차적 배분)
추구이념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의사결정	구유통정치와 통나무굴리기식 의사결정	계급대립적 성격
특징	정책의 내용이 하위단위로 세분되고 다른 단위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함)	세부사업들이 사업 간에 강한 결속력과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부사업단위로 독립적인 집행 불가능
순응도와 자율성	높음(표준운영절차 확립 용이)	낮음(표준운영절차 확립 곤란)
저항	낮음	높음
갈등	낮음	높음
구체적인 예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부의 보조금 지급, 각종 지원 정책, 수출정보의 제공·농작물 작황 예보 등 정부의 정보제공, 국유지불하(택지분양),수출 특혜 금융, 주택자금 대출 등	누진세제도, 통합의료보험정책, 임대주택 건설, 빈민층에 대한 교육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부(負)의 소득세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극빈자 보호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 4.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답) ④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작은 정부론자들이 정부실패의 근거로 제시한 요인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논거가 된다.

#### <<핵심체크>>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근거 - 정부실패

유형	내용	대응방안
사적목표의 설정(내부성)	관료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공익)와 조직내부의 목표가 괴리를 빚는 현상	· 민영화
파생적 외부효과	① 의의 :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 ② 원인 :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미래예측의 곤란성 등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X-비효율성(공급비용 체증)	① 의의 : 독점으로 인한 관료들의 관리상·기술상·행태상의 비효율성 ② 예 : 무사안일, 복지부동, 도덕적 해이, 소극적 업무행태, 최신기술에의 부적응 등	· 민영화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권력의 편재	정부가 규제권한 등을 통해 권력과 특혜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배의 불형평	· 민영화 · 규제완화



6.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
|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
|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참여하게 대립하는 상황 |
| ㄹ.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에 의한 편익이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답) ① ㄱ은 고객정치상황을, ㄴ은 대중정치상황을, ㄷ은 이익집단정치상황을, ㄹ은 창도가정치상황을 의미한다. 수입규제 등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상황과, 음란물 규제는 대중정치상황과, 한약규제는 이익집단정치상황과, 원자력발전규제는 대중정치상황과 관련된다.

<<핵심체크>>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구 분	대중정치상황	이익집단정치상황	기업가정치상황	고객정치상황
비 용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좁게 집중	넓게 분산
편 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정치적 활동	비용부담자와 혜택자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와 혜택자 모두 강력한 집단행동	비용부담자는 집단행동, 혜택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혜택자는 집단행동
NGO의 역할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여론화하려는 역할	NGO 역할이 위축됨	규제형성을 위한 여론형성 등 창도가로서 역할	규제를 형성하려는 특정이익집단의 감시자로서 역할
정부의 모습	정책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해짐	정부의 역할이 위축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규제기관에 포획되어 느슨한 집행이 이루어짐	특정이익집단의 로비로 인한 포획 현상이 나타남
예	독과점 규제, 방송·통신의 윤리 규제, 종교활동 규제, 각종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의약분업과 관련된 규제, 노사 관계와 관련된 규제	환경규제, 소방규제, 작업안전규제, 식품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 경제적 규제

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 모형 -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② 점증 모형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 ③ 사이버네틱스 모형 -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 ④ 쓰레기통 모형 -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답) ③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의 환

류를 통한 습관적, 반복적, 적응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오답정리>>  
 ① 합리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비현실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다. 인간의 제한된 분석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모형은 만족모형이다.  
 ②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시한다.  
 ④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 갈등 상황의 해결보다는 간과(oversight)나 탈피(flight)현상이 나타난다.

8.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답) ④ 준실험 설계가 아닌 진실험 설계는 자연과학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하여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강화시킨다.

<<핵심체크>> 정책실험

진실험	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사회실험방법
	변수통제	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
	장단점	내적 타당성은 높으나,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낮음
준실험	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회실험
	변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조에 의한 통제(매칭에 의한 배정) :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비교집단설계, 회귀불연속설계</li> <li>• 재귀적 통제 : 분절적(단절적) 시계열 분석, 분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li> </ul>
	장단점	내적 타당성은 낮으나,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높음
비실험	의의	비교대상집단인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행하는 사회실험
	실험방법	단일 사례연구, 단일집단 사전·사후 측정연구
	변수통제	통계적 통제,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
	장단점	내적 타당성은 극도로 낮으나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높음

9. 다음 중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ㄴ.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ㄷ.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ㄹ.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답) ② 애덤스의 형평성이론(ㄱ), 브룸의 기대이론(ㄴ), 로크의 목표설정이론(ㄷ)은 과정이론에 속하며,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ㄹ)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핵심체크>>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기대이론	① Vroom의 기대이론, ②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④ J.Atkinson의 기대모형
목표설정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
강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작동적 조건화 이론)

10.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 ③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답) ②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른 관직임용제도인 반면, 대표관료제는 인사행정에 사회적 성격을 도입하고 일부 사회집단 구성원을 우대하려는 제도이므로 인사행정의 실제에서 대표관료제에 따라 우대받는 사람 때문에 보다 우수한 실적평가를 받는 임용후보자가 탈락하는 경우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는 상충된다.

<<핵심체크>> 대표관료제의 장단점

유용성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보적 평등의 실현(실질적 기회균등, 적극적 평등)</li> <li>• 내부통제를 통한 책임성 제고</li> <li>• 행정의 대응성 증진</li> <li>• 행정의 형평성(민주성) 확보</li> <li>• 주관적(심리적) 책임의 적정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li> <li>• 합리적 정책결정</li> <li>• 행정의 신뢰성 증진</li> <li>•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li> <li>•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차별과 사회적 분열 조장</li> <li>•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효율성 저하</li> <li>• 공직취임 후의 재사회화 불고려</li> <li>• 대표성 확보의 기술적 어려움</li> <li>•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 저하</li> <li>• 시민통제의 무력화</li> <li>• 감축관리와 충돌</li> <li>• 자유주의 원리와 충돌</li> <li>• 실적주의와 충돌</li> </ul>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답) ②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에 정부관료제를 예측시킴으로써 국민이 지지한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여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핵심체크>> 엽관주의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li> <li>• 관료제의 쇄신 : 대량적인 공직경질</li> <li>• 민주통제와 책임행정 구현</li> <li>• 강력한 정책(공약)추진</li> <li>• 관료적 대응성 향상</li> <li>• 중요한 정책변동 대응에 유리</li> <li>• 집권정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 통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비전문성</li> <li>• 위인실관 등 행정의 비능률성</li> <li>• 행정의 안정성·일관성 저해</li> <li>• 행정의 중립성 저해</li> <li>• 공직의 사유화</li> <li>• 정치적·행정적 부패</li> <li>• 기회균등 상실</li> <li>• 공정성·공익성 상실</li> </ul>

12.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 ②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 ③ 계층제적 조직 기반
- ④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답) ③ 지식행정관리는 계층제적 조직이 아닌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핵심체크>> 전통적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

구 분	기존의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원의 능력	조직 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13.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답) ③ 재무관점의 성과지표는 과거관점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이며,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가 있다.

<<핵심체크>> 균형성과표(BSC)

의의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관점 : BSC는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는 관리방식임.</li> <li>• 상호균형 : BSC는 고객 관점(외부시각), 내부 프로세스 관점(내부시각), 혁신 및 학습 관점(미래시각), 재무적 관점(과거시각)에 대한 측정표로 외부와 내부, 미래와 과거 간에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기법임.</li> <li>• 인과관계 : BSC의 성과지표들은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동인으로부터 재무 관점의 향상된 재무성과에 이르기까지 인</li> </ul>

	<p>과관계로 연계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과 환류중시 : BSC는 성과측정을 통해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체제임.</li> <li>체제적 관점 : BSC는 조직의 비전과 임무를 하위체제인 전략으로 연계하고, 전략을 하위체제인 성과지표로 연계하는 시스템임.</li> </ul>
공공부에 적용	BSC의 원형은 재무관점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재무적 가치가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과는 다른 BSC의 인과구조가 필요함(기관의 특성이 사기업에 가까운 경우[공사 등] 재무관점을 포함하고, 기관 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예산이 할당되는 경우[정부부처]는 재무측면은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보고 사명달성의 성과 또는 납세자관점을 가장 상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②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 ③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답) ① 매트릭스 구조는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소요 및 결정의 지연이 야기된다.

<<핵심체크>> 매트릭스 구조

의의예	<p>기능부서 통제 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이원적 권한체계를 지닌 조직구조(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p> <p>예) 대사관 조직,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모두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p>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인 사업수요(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li> <li>• 조직구성원이 다양한 업무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능력발전 촉진</li> <li>• 신규채용없이 기존조직의 인적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li> <li>• 조직단위 간 정보흐름의 활성화로 할거주의 극복 및 갈등조정이 용이해짐</li> <li>• 기술의 전문성과 제품라인 혁신의 동시 충족</li> <li>• 분화와 통합의 조화를 추구하는 체제론적 사고에 입각한 조직</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적 명령계통으로 인한 역할모호성으로 구성원들에게 혼란, 좌절, 갈등, 스트레스 야기</li> <li>• 구성원들의 소속감 결여와 지휘계통의 다원화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 조정의 어려움 발생</li> <li>•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 소요 및 결정의 지연</li> <li>• 권한구조가 다원화되므로 관리계층 증가</li> <li>• 두 명의 상사로부터 상충되는 요구를 받을 경우 역할갈등 야기</li> <li>• 상관은 하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제할 뿐 하급자의 완전한 통제 불가능</li> <li>•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간 권력투쟁과 갈등 발생</li> <li>• 조직관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저하</li> </ul>

1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 ㉠ )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 ㉡ )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        |        |
|--------|--------|
| ㉠      | ㉡      |
| ① 현금수취 | 현금지불   |
| ② 현금수취 | 지출원인행위 |
| ③ 납세고지 | 현금지불   |
| ④ 납세고지 | 지출원인행위 |

(답) ④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불사실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을 (납입고지)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6.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용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 요인으로 간주한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답)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아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를 지출예산의 형태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목적은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조세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정리>>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중앙예산기관이 구체적인 지출항목 없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고 예산집행단계에서 구체적 항목별 지출은 각 개별부서가 총액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행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을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비금융공공부문으로 구성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금융성 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③	통합재정수지에서 용자지출은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간주된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함범위 : 비금융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금융성 기금, 세입세출 외의 전대차관 도입분과 세계잉여금 등</li> <li>• 제외되는 영역 : 금융성격을 띠는 공공금융기관 및 금융성 기금, 정부산하기관·정부출자기관·한국은행 등 공공금융기관</li> </ul>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구분하여 작성</li> <li>•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li> </ul>
구조	① 세출 및 순융자(대출순계)의 기능별 분류, ② 세입과 세출의 경제성질별 분류, ③ 보전재원

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답) ③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노무현 정부(2006년)에 도입되었다.

<<핵심체크>>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구성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이 높은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의 군
대상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지방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지 않음)</li> <li>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상당하는 직위(부시장, 부지사 및 부교육감 등)</li> </ul>
진입	후보자 교육(Action Learning) 이수와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되며, 인사심사(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임용	특별채용(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승진임용 또는 진보의 방법에 의하며 대통령이 함.
인사 관리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어 법정부적 풀 관리의 대상이 되며, 각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권과 복수감독권을 행사함.
정원 관리	계급(관리관, 이사관 등)이 폐지되고 직위의 직무 값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등급에 의해 합리적인 보수등급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충원	개방형 직위(20% 이내), 부처간 공모직위(30% 이내), 기관자율직위
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함.</li> <li>고위공무원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되, 부처별로 최상위등급의 인원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하위 2개 등급(미흡 + 매우 미흡)의 인원비율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li> </ul>
보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결합)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적격심사 :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마다 실시</li> <li>수시적격심사 : 총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 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음.</li> <li>적격심사 실시 기관 : 안전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li> </ul>
정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만 엄격한 성과관리·적격심사로 인해 신분보장이 완화됨</li> <li>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li> </ul>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 ③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답) ②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출입할 수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체크>> 중앙통제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사무 등의 처리의 지도·감독	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li> <li>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li> </ul>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li> <li>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간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i> <li>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li> </ul>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li> <li>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li> <li>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li> <li>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li> </ul>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자치단체는 감사원의 필수적 회계검사 대상기관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할 수 있다.